

한국사회의 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김영미 교수
상명대 행정학과 (정보행정)

I

20세기 최대의 발명품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컴퓨터를 들 것이다. 컴퓨터는 어쩌면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도구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 컴퓨터가 탄생한 지 올해로 50년이 된다. 194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무어공학부의 존 모클리 등이 무게 30톤에 면적을 41평이나 차지하는 "에니악"(ENIAC)이라는 공룡 컴퓨터를 발명한 이래 컴퓨터 관련 테크놀러지는 쉴새 없이 약진을 거듭해서 이젠 컴퓨터를 빼고는 현대사회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게 됐고 컴퓨터 없이는 현대사회를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

수치계산을 위해 발명된 에니악은 덩치만 컸지 성능은 요즘의 개인용 컴퓨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었다. 컴퓨터 기술은 에니악 이후 트랜지스터 시대를 거쳐 집적회로 컴퓨터로 발전을 거듭했고 이제는 통신기술과 접목됨으로써 다목적 기기로 탈바꿈했다. 화상 문자 음성 등 다원화된 정보가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멀티미디어의 실용화 추세에 따라 사회 및 산업구조는 물론 인간의 의식세계까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도 오는 2000년대가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첨단 모험산업의 세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가 "또 하나의 장정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고 오늘을 평가한 것이나, "메가트렌드" 시리즈의 저자 존 네즈빗이 20세기말 대변화의 으뜸

으로 '정보화 사회의 등장'을 꼽은 것도 지금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전환기임을 말해 주고 있다.

19세기말 새로운 세기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뼈아픈 역사적 체험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로서는 다시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게 된 지금 남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정보화 과정은 어찌 보면 단순히 탈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중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현재 한국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II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의 혁명이 필수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국가마다 기업마다 기술력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정보통신은 정보화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을 판가름 짓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돼 버린 기정사실이다.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 산업의 선점을 통해 정보화시대의 세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펼쳐질 21세기를 전제한다면 정보통신 관련 종합대책은 아무리 가다듬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보 인프라야말로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가를할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출범 때부터 이른바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Information Super-highway)라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나, 일본이 "신산업자본"(新産業資本)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정보고속도로인 광통신망 구축작업에 나선 것은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는 2000년까지 섬 전체를 아예 '인텔리전트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싱가포르의 "IT-2000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국가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경제 강국의 지속 여부가 이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국가 정보통신의 기반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와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최첨단의 정보통신 편익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보통신의 기반 구축 사업을 하나같이 일찌감치 착수했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단지 미국은 정치지도자가 주도한데 반해 일본과 싱가포르는 건실한 행정조직이 앞장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정보통신 분야가 근래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궁화 위성의 상용 서비스가 개시됐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보화의 추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정책 비중과 관심도 커지고 있음 역시 사실이다. 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가정까지 연결되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인가 하면,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도 본격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의 주도적 산업이 되는 사회, 아시아 대륙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정보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사회"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런 전략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 인프라 구축은 경쟁국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한국 전산원 백서에 의하면 일본이나 미국, 싱가포르에 비해 1/3~1/8 밖에 안된다.

애초부터 우리 정치권이나 정치지도자에게만 정보화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정책 입안 과정에서 매번 확인되듯이 여전히 이전투구적인 경쟁의 늪에서 헤어 나지 못하는 정치권에 미래지향을 요구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정부 쪽에 정보화의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로는 정보화를 외치지만 현실은 국가정보화 기반 같은 국책 프로젝트마저 부처이기(利己) 닷인지 범정부적인 컨센서스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아직도 정치적인 고려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자못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정보 인프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간 통신망의 사업자 선정 같은 시급한 일상 업무조차 충선을 이유로 연기되는가 하면, 선



정기준도 정치적 후유증을 고려해 몇차례 뒤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나마 통신시장 개방으로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해져 나선 것이 이 정도이다.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은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다음날 또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인 현실이다.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즉흥적으로 이뤄져 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며칠도 안돼 수정 또는 번복되거나 백지화하기 일쑤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주도해 정보화사회 실현을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전화요금 정책 입안 과정을 잘 살펴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의 거센 반발로 3일만에 철회된 바 있는 전화요금 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보여준 조령모개식 정보통신정책의 표본이다. 정보통신부는 그간 신도시에 대해 시내전화요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가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간의 전화통화에 시외요금을 적용, 한국통신의 수지개선을 꾀하고 피크타임대(오전 9~12시) 시외통화에 30%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전화요금 조정안"이라는 것을 불쑥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도대체 설득력이라고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수도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당정협약에서 정보통신부가 그 요금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기로 함으로써 탁상 행정식 통

신정책을 스스로 시인했던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내세운 전화요금 조정의 배경은 시외-국제전화는 이윤이 많이 남는 반면 시내와 근거리 구간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신도시 등 인접지역 구간에 시내요금체제가 적용되고 있어 원가보상률이 5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먼저 시내전화 영업의 원가분석을 투명하게 제시했어야만 했다. 그것은 시내-외를 막론한 전화요금의 정확한 원가분석이 이뤄진 뒤 요금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단일요금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일차적으로 신도시 지역에 대해 지난 93년 7월 1일자로 시외전화요금체계를 시내요금 체계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시외전화요금체제로 환원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수원간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시내요금체제로 환원한 뒤 3개월 만에 이를 뒤집음으로써 통신정책이 정치 목적에 이용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편의주의식 통신정책이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조령모개식의 통신정책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시로 불거져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초 7개 분야 30개 신규 통신사업자를 95년 말까지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개월 뒤 선정 무기연기를 밝히더니 9월에는 96년 상반기 선정으로 선회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은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컴퓨터의 보급,
컴퓨터의 교육,
정보 자원의 분배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정보화 정책이 지역 계층 부문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을 3개월 앞두고 선정 방식을 당초 추첨식에서 기술력 등에 의한 평가로 전환했다. 게다가 '도덕성,' '5년 내 신규사업 진출' 등을 평가 항목에 넣는 등 심사기준을 수시로 바꿈에 따라 신규 통신사업 참여희망업체들은 사업 계획서 작성에 충실하기보다는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행적을 쫓는데 힘을 쏟거나 경쟁 업체와의 진흙탕 싸움에 열을 올리게 됐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심사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통신 자회사에 지분을 할애한 것도 즉흥적인 탁상 행정의 예로 꼽힌다.

정보통신부가 한국TRS 지분 매각과 관련, 주식 일부를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보통신부가 정부 채투자기관의 주식을 자의적으로 특정기업을 거론하며 매각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항상 대외경쟁력 강화,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그럴듯하게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정보관련 학자들은 그때마다 그 같은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보화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관료 주도 통신정책을 비판하면서 관료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보화 과정의 지름길이라는 등의 정보통신부 무용론을 펼치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기간에 걸친 정보통신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내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의 독점적 공영화에도 불구하고 설새 없는 연구 개발 투자를 포함한 대형 설비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통신 분야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급전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이 같은 육중한 기간 통신 중심만

으로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 산업으로의 개혁과 변신을 저해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다행히 정보통신 시대의 새로운 전개를 너무 늦지않게 간파한 정부와 통신업계가 최근 들어 본격적인 정보화사회 건설에 앞장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는 98년 국내 통신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 시장에서의 그간의 과점 체제를 깨고 본격적인 국내시장 경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상으로는 너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 경쟁 시점을 늦춘 것은 물론, 기술적 측면도 없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너무 독점과 공영의 안일에 탐닉했던 요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쫓겨서 국내 경쟁 체제로 돌아선 탓으로 대외개방까지엔 시간 여유가 너무 없어 인력확보나 기술개발의 측면에서도 국내 경쟁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기술인력의 조기 확보이지만 이 역시 특별한 왕도는 없을 것이다.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지만 일시에 경쟁에 나선 업계에서 과당경쟁이 일어 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정부가 최선의 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기술인력의 조기 양성에 산학연구계를 망라한 협동 체제를 구축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술적 제약 못지않게 설비에서도 축적이 없어 이 분야의 해외 의존은 더욱 높아질 것 또한 자명하다. 통신시장 개방 이후에도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멀리 내다 보는 연구 투자와 소프트 개발이 관건일 것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과 효율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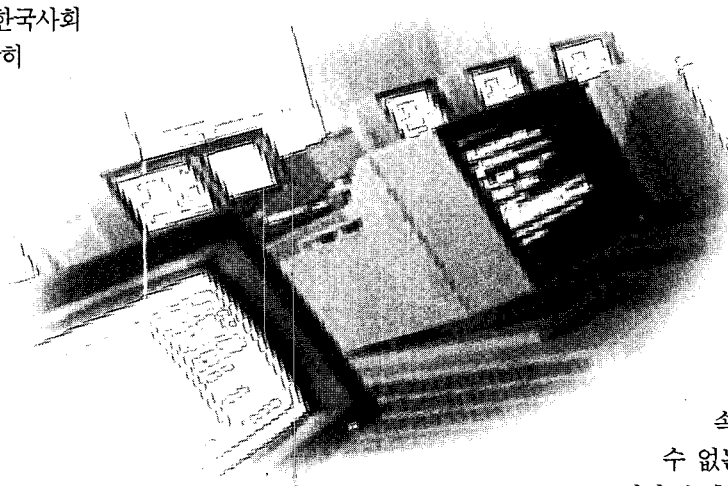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기술적 제약과 설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이니셔티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찬 과제다. 정보화의 이념과 목표, 중심 과제들을 민간부문이 공유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엄청난 재원 마련과 기술적 애로 극복을 위해서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정부의 종합 기획력과 조정 기능, 정책 협조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휘체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원화(二元化)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 정보화가 경제와 사회, 정치 및 행정과 교육 등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 각계와 더불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보통신 분야는 긴 안목의 비전과 시장 논리가 우선되는 백년대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정부만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사고와 인식을 선회해야만 할 것이다.

III

21세기는 다원화된 정보가 고속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역시 컴퓨터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보화되면 될수록 컴퓨터는 더욱 더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컴퓨터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장미빛 청사진을 선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보화에는 심각히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빈부간의 격차를 더욱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유층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력을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 장비로 무장하여 새로운 에너지인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정보화의 이익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정보화 정책을 1978년부터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1990년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을 조사했는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인(10%), 노인층(18%), 문맹자(10%), 경제적 빈곤층(18%) 등 프랑스 전국민의 57%가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혜택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역간의 편차 역시 현재보다 더욱 크게 벌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992년 말 현재 '수도권 집중 현황'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의 44.1%와 대학교의 50%, 제조업체의 57%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50.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정보화사회 속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지역간에 혹은 도시와 농촌간의 부의 편차가 결국 정보화 기기와 정보 소유의 편차 현상을 낳고 이로 인해 지역간에 문화적 불평등의 골을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 현장의 분별이 촉구된다. 정부는 21세기 초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활용 능력을 갖도록 교육체제를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점수 위주에다 학생들의 잠재적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 교사도 부족하고 기재도 사회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등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은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컴퓨터의 보급, 컴퓨터의 교육, 정보 자원의 분배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정보화 정책이 지역 계층 부문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한 문화적 불평등은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문제시됐던 노사간의 갈등을 머지않아 정보의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으로 바뀌어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부자의 생활 패턴, 스타일, 습관이 문화적 빈자의 것과 급격한 차이가 발생할 때 그 위화감은 노사간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98년에 입주 예정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 내에 소위 '인텔리전트 홈'이 등장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해 홈쇼핑, 홈뱅킹, 화상 회의, 원격 검침, 무인 전자경비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통신 정책 입안자들은 '인텔리전트 홈'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기 집도 없이 월세를 전전하는 서민과의 대비를 떠올리면서 정보화 정책을 입안하는 일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정보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보사회 적응

에 뒤 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제공되는 정보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전자 공간을 통해서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 표현 및 신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최다다수에게 정보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확충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화 의식 제고도 절실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보화 교육과 의식개혁 작업이 반드시 함께 실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정부가 2015년까지 각 기관 기업 병원 가정 도서관 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멀티미디어 사회를 실현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면 정부의 노력을 결실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50년의 컴퓨터 역사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예산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융통성 있는 배분과 함께 정보의 도용,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에 대비, 법체제를 정비하는 등 정보화시대의 모랄 확립도 서둘러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걱정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인성과 전통문화의 상실이다. 인간은 서로 살을 비비며 살아가는 동안 정감도 살아나고 문화도 이어나가지만 기기를 통한 사회생활은 마음과 인간관계를 건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멀티미디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양한 가치관이 살아 움직이는 열린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컴퓨터 사회를 관조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저마다의 노력이 거듭되어야만 할 것이다.